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북한의 시장화: 현황 및 과제
발제자 :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고려대 교수)
일 시 : 2016년 4월 7일 오전 7시 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16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4월 7일 정책세미나에서는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고려대 교수)을 연사로 초청해 [북한의 시장화: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북한이 아래로부터 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초석은 북한의 정보화와 시장화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과소·과대평가 되어선 안 되며,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는 중요하다.
-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확대 이유는 4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국가 배급망의 마비 또는 붕괴이다. 두 번째 북한은 체제상 당 중심 국가로 시장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세 번째 국가의 책임방기로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는 의도다. 네 번째 최근 들어서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를 국가 재정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 2010년 200여개의 시장이 2015년 400여개로 늘어났다. 북한 당국은 시장을 없애기보다 시장에서 나오는 잉여물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자릿세라는 세금을 통해 걷어 들이는 북한의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북한은 시장을 제재했다 풀었다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대해 관리를 해왔다.

- 북한의 시장화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지만,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 운영되는 구조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 중 한국 제품도 있는데 상표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도용 방식이다. 참이슬을 참대술로, 삼성을 성으로, LG를 G로 바꾸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이 북한에서 최고급 상품으로 취급받는데, 이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시장을 확산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북한경제구조는 완벽하게 이중경제 형태다. 계획경제 vs 시장경제, 특권경제(당·군) vs 일반경제(내각·민수), 중공업위주 경제 vs 경공업위주 경제, 평양경제(달러·위안화) vs 지방경제로 이뤄졌다. 이러한 이중경제의 특징은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이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여러 개로 분화되어 있는 경제구조다. 공정경제는 달러와 위안화를 관리하고, 군경제는 민수경제와 다르게 관리한다. 공정경제와 군경제는 북한의 전략적 부분으로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북한의 경제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공정, 군경제가 50% 정도, 내각경제가 30% 나머지가 장마당과 같은 시장을 통해 이뤄진다.
- 북한의 사회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 사상적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인센티브가 많이 무너졌다. 평양에서 아파트 사용권이 거래가 된다. 이런 거래는 불법이지만 북한판 부정부패의 확산으로 성행하고 있다. 북한의 공장 가동률은 30%에 불과하다. 배급망 확충을 위해선 공급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시장을 통제하는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히려 시장을 당의 재정 충당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북한에서 사유재산을 가진 돈주(북한의 신흥자본가)와 개인 사업가들을 묶은 자본가에서 자유자본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 북한은 지금까지 시장을 체제 유지를 위한 보완요소로 보고 있다. 이제 북한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보완요소가 아닌 대체요소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주민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北변화의 초석 될 北시장화에 대한 과소·과대 평가는 금물

: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을 의식적으로 활용

- 북한 연구자에게 북한의 시장화는 중요한 화두다. 북한이 아래로부터 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초석은 북한의 정보화와 시장화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과소·과대평가 되어선 안 되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시장화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어떻게 제대로 정착시킬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 북한이 1985년 발간한 경제사전에는 시장에 대해 “상품생산이 존재함으로써 시장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분업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실려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북한도 분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한다.
- 마르크스는 사회발전론에서 자본주의 이후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갈 것이라 했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을 용인한다. 마르크스는 또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제적 공간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에 의해 의식적으로 이용된다고 말한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필요하면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북한 경제사전에는 시장을 조직시장과 비(非)조직시장으로 구분한다. 조직시장은 국가

및 협동단체에 의한 상업이고, 비조직시장은 농민시장의 개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은 비조직시장으로 장마당, 종합시장 등이 있다.

■ 北당국 시장을 제재-유화로 완급조절 해 관리·통제

: 2015년 현재 400여 개로 확대...없애기보다 시장에서 나오는 잉여를 취해

-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확대 이유는 4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국가 배급망의 마비 또는 붕괴이다. 탈북자들은 배급망이 완벽하게 붕괴 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본다. 북한에서 배급되는 가장 중요한 상품은 식량으로, 배급망의 완전 붕괴는 사실이 아니다. 북한 당국은 모자란 식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시장을 계획부문의 보완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은 체제상 당 중심 국가로 시장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북한의 시장 변천사를 보면 북한 당국이 시장의 확대를 완급조절하며 통제 해왔다. 세 번째 국가의 책임방기로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는 의도다.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5억 달러면 해결할 수 있었지만, 김정일은 핵과 군을 위해 식량 배급을 중단했다는 증언들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최근 들어서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를 국가 재정수입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장가동률이 30% 수준일 만큼 낮은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을 통해 재정 수입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의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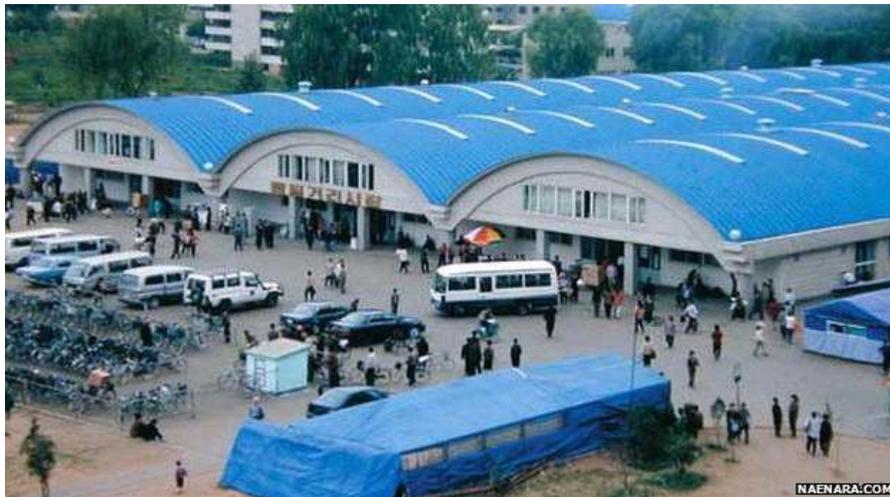
- 북한 시장의 변천사를 보면 1958년 농민시장이 개설되었다. 1958년은 북한이 완벽한 사회화를 이룬 시기로 협동농장이 구성되고 공장과 상업 유통망이 사회화되어 '민주조선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필요한 물품들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자 일일 농민시장을 개설했다. 시장이 지나치게 확대 되자 일일장을 10일장으로 전환시켰다. 1984년은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다시 일일장을 개설하고 농산품뿐 아니라 경공업 제품들도 거래토록 했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일일장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된다. 1998년과 1999년은 다시 확대된 시장을 없애려 노력 했다. 시장을 관리하는 기관인 사회안전성(한국의 경찰)과 보위부(한국의 국가정보원)를 설치하여 통제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 300~350여개의 시장이 생기면서 북한 당국은 시장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02년 소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시장을 허용한다. 시장을 허용하는 대신 2003년 두 가지 획기적 조치를 취했다. 첫 번째,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만들었다. 즉 산재 되어 있는 시장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조치로, 시장에 대한 통제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다. 그리고 거래되는 물품의 수도 확대하였다. 두 번째,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개설했다. 원자재와 중간재 제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북한의 공장과 기업들이 다시 가동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 김정일은 이 같은 조치에도 시장통제가 어려워지자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화폐개혁은 북한이 장마당 세력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화폐개혁이 있자 장마당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민들은 북한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달러나 위안화를 사용했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 당국은 다시 유희적인 태도를 취했다. 2010년 200여개의 시장이 2015년 400여개로 늘어났다. 북한 당국은 시장을 없애기보다 시장에서 나오는 잉여물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자릿세라는 세금을 통해 걷어 들이는 북한의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북한은 시장을 제재했다 풀었다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 북한의 이중경제구조, 계획vs시장, 특권vs일반, 평양vs지방
: 긍정, 군경제 50% 수준, 내각경제는 30% 수준에 불과해



[평양의 통일거리시장 모습]

- 북한의 통일시장(위 사진)은 개설 당시 지붕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북한이 시장을 통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끌어들였다고 보면 된다. 이 안에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지만,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 운영되는 구조다.
- 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제품 중 한국 제품도 있는데 상표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도용 방식이다. 참이슬을 참대술로, 삼성을 성으로, LG를 G로 바꾸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것을 미뤄볼 때 북한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미흡하게나마 작동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이 북한에서 최고급 상품으로 취급받는데, 이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시장을 확산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도용 상품들]

- 시장화 확산 이후 북한경제구조는 완벽하게 이중경제(듀얼 이코노미)로 구분됐다. 계획경제 vs 시장경제, 특권경제(당·군) vs 일반경제(내각·민수), 중공업위주 경제 vs 경공업위주 경제, 평양경제(달러·위엔화) vs 지방경제로 이뤄졌다.
- 이중경제의 특징을 보면 완벽하게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이 단절되어 있다. 또 분화경제로 여러 개로 분화되어 있다. 공정경제는 달러와 위안화를 관리하고, 군경제는 민수경제와 다르게 관리한다. 공정경제와 군경제는 북한의 전략적 부분으로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북한의 경제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공정, 군경제가 50% 정도, 내각경제가 30% 나머지가 장마당과 같은 시장을 통해 이뤄진다.

■ 시장 통제는 일시적 현상, 시장 통제 당(黨) 재정 총당
: 공장 가동률 30%에 불과...공급 시스템 제대로 작동 못하는 상황

- 북한에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고 있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계획부문과 시장부문 양쪽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장부문이 계획부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 기업은 생산요소를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에서 획득한다. 기업은 자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통해 보충하고 있다. 시장이 국가의 틀 속에서 일정부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국가가 시장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시장을 활용해서 부족한 유통 또는 생산 부분을 기업의 형식으로 보완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자체로 봤을 때 시장과 당국이 공존하는 형태로, 당이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가 시장으로부터 많은 잉여를 가져오고 시장은 당의 관리 하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하는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대립적인 모습도 있다. 계획경제가 시장경제의 잉여를 수탈하고 시장경제는 국가 시스템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정부패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
- 북한의 시장화에는 딜레마가 있다. 시장이 기존의 정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기존 규칙에 반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 사상적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인센티브가 많이 무너졌다. 평양에서 아파트 사용권이 거래가 된다. 이런 거래는 불법이지만 북한 부정부패의 확산으로 성행하고 있다.
- 북한이 스스로 배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민생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겼다 볼 수 있다. 또 국내 자원의 부족 부분을 시장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공장 가동률은 30%에 불과하다. 배급망 확충을 위해선 공급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시장을 통제하는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히려 시장을 당의 재정 총당에 활용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 北시장, 체제의 보완요소 아닌 체제전환의 대체요소로 바뀌어

: 붉은 자본가인 돈주와 개인 사업가들을 자유자본가로 만들어야

- 2014년 북한주민 대상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얼마나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시장으로부터 식량을 구입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것은 북한의 시장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북한의 시장화는 중요한 현상이며 가능한 제대로 된 시장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북한의 중요 시장화 과제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시장의 작동이다. 북한은 아직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이 강하기 때문에 분권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또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제력이 필요하다. 미약하게 사적재산권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의 교환도 필요한데 가장 큰 전제는 재산권의 보장 여부다. 두 번째,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다. 북한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강탈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폐개혁이다. 세 번째 어떻게 시장화를 진행할지다. 사회주의 경제는 주로 당의 결정에 의해 움직인다. 북한이 시장 원리에 맞게 주체사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개혁개방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사유재산을 가진 돈주(북한의 신흥자본가)와 개인 사업가들을 붉은 자본가에서 자유자본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 북한은 지금까지 시장을 체제 유지를 위한 보완요소로 보고 있다. 이제 북한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보완요소가 아닌 대체요소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주민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16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북한 기업들의 투자금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북한의 은행 시스템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분리되어 있지만, 북한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북한이 일원화 제도를 만든 것은 당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북한 주민들은 북한은행에 저축하지 않는다. 은행의 기능은 단순히 국가 재정수입이 들어오면 분배하는 역할과 외화를 받기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투자를 하기 위한 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없다. 기업 투자자금은 개별적으로 조달 받는다.

질문2 북한에도 교육, 의약품과 같은 시장이 있는가?

답변 북한 교육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교육이 심하다. 특히 영어와 관련된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의약품은 한의학과 같은 한방이다. 필요한 약품의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 들어온다.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약품들은 거의 없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